

한국생산성본부 비위 의혹 조사보고(요약)

1. 조사 배경

- 한국생산성본부에 대한 국조실 이첩('23.4.20) 및 000 의원실 문제제기(3.31), TV조선 보도(4.14) 등에 따라 전반적 조사 필요

< 비위 제보 내용 >

- ① (국조실 이첩) 회장(000)의 방만경영, 본부장(000)의 지인 특혜제공 의혹 등
 - 회장(000)의 ① 감사기능 무력화 및 감사 무마(성희롱 등 3건) ② 산업부 감사결과 지적 사항('20.11) 이행 지연 ③ 단톡방을 통한 직장내 괴롭힘(근무시간외 업무지시 등)
 - 본부장(000)의 지인 업체에 인쇄물 제작의뢰 특혜제공 등
- ② (의원실 언론)
 - 성추행('22.4월) 및 스토킹('23.2월) 신고 관련 조치 미흡

2. 조사 결과

* (기간/조사자) '23.4.28.~5.16.(11일간) / 2명

< 총 평 >

- ◆ 대부분 의혹은 사실 아님, 단톡방 운영은 일부 부적정, 지인업체 특혜제공은 사실
 - 감사기능 무력화 의혹은 사실 아님, 감사 지적사항 미이행은 일부 사실
 - 단톡방을 통한 근무시간외 업무지시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, 단톡방을 과다(56개) 개설하여 업무시간외 알람을 통한 직원의 스트레스 원인 제공은 다소 부적절
 - 본부장의 지인 업체 인쇄의뢰와 관련하여 내부계약절차를 위반한 특혜 제공 사실은 확인되나, 대가 수수 사실은 미확인

□ 감사기능 무력화 및 감사 무마 : 사실 아님

- 감사기능 약화를 통한 감사조직 무력화 의혹 관련, 규정에 따른 조직 개편, 감사실장 직급 상향 및 감사실 직원 승진 등 사실상 감사조직 강화
-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 미실시 관련, 피해자의 종료 요청이 있어 매뉴얼에 따라 조사를 중단한 상황으로 징계와 무관한 사안
- 인쇄업체 특혜 제공 직원에 대한 감사 지연 및 감사 중 승진 의혹
 - 시급한 감사건 발생(스토킹·소송사건) 등으로 지연되어 감사무마로 보기 어려움
 - 파감인 000은 제보 ('22.8월)前 승진 '22.7월)하였고 감사 중 보직만 변경' 23.1월)
- 스토킹 관련 직원 적정 처분 미흡 의혹
 - 자체감사 실시 결과 스토킹이 아닌 개인정보 침해로 가해자 해임조치

- 산업부 감사('20.11월) 지적사항(환수) 이행 지연 : 사실 확인
 - 임원 및 재직자에게 환수고지서를 발급토록 하였으나 미조치, 퇴직자는 환수 여부를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미상정
 - 다만, 000 회장 등에 대해 제기된 부당이득반환 소송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었으나 판결지연('23.6월)으로 환수가 지연된 측면도 있음
- 무분별한 조직개편 및 특혜성 인사 의혹 : 사실 아님
 - 조직개편은 정관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 시행하고, 전보(징계자) 및 경력자(15년 이상) 채용은 인사 및 채용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실시
-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개설을 통한 괴롭힘 : 일부 인정
 - 코로나 대응, 정보공유를 위해 부서별 단톡방 개설(현재 56개 운영중)
 - 근로시간 외에 업무와 무관한 사진 및 글은 없고, 대부분 일정 공유, 정보교환, 행사 후 소회 등 게시
 - 단톡방 운영으로 직원 스트레스 유발은 일부 인정
 - 직장 내 공식적인 고충민원은 없었으나, 블라인드앱을 통해 표출된 직원들의 불만을 노조위원장이 회장과 면담 시 몇 차례 문제제기*
 - * 다만 0회장은 노조를 통해 단톡방에 대한 직원 불만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
 - 직장내 괴롭힘 의도는 없었다 하더라도 근무시간외나 주말에 수시로 올리는 알람이 직원들에게 다소 부담으로 작용
- 인쇄업체 특혜 관련 청탁금지법 및 내부규정 등 위반 : 일부 사실
 - 000본부장이 행동강령(이권개입 금지, 불공정 지시)과 계약절차(계약담당 또는 인쇄전담 자회사인 한샘미디어에 의뢰)를 위반하여 장기간 지인업체에 인쇄 의뢰 및 직원들에게 소개 메일 발송 등을 통해 특혜 제공 사실 확인
 - 다만,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사실은 확인되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, PCSI(고객만족도 조사)사업의 적극적 추진, 인쇄업체에 직접 의뢰하던 관행 등을 고려 수사의뢰는 미 실시
 - 기타 다수 직원도 관행에 따라 계약절차를 위반해 직접 인쇄의뢰 사실 확인

3. 조치 계획

- 행동강령 및 계약절차 위반(000 징계), 감사지적 이행 지연(개인주의), 계약절차 위반 및 무분별한 단톡방 개설 운영(기관주의)